

【일련번호: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주의요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 검사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시설공사 하자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1. 가. 에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 라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고성군 시설공사의 하자보수 업무규정」 제4조에 의하면 시설공사에 대한 최초의 하자검사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의 검사는 년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며, 하자담보기간 만료시는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7년 8월 □□ 종합감사 시행 후 ○○-228(2018. 1. 5.)호로 종합감사 결과 통보하면서 처분요구서 NO 12. 시설공사 하자관리 업무 소홀로 행정상 조치 시정으로 한 사실이 있으며, □□-3162(2018. 4. 2.)호 2017년도 □□ 종합감사 조치결과 제출 시 해당항목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2018년 상반기부터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2017. 8.~ 2018.12.까지 ‘∞∞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83개 사업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200회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2017년 8월 □□ 종합감사 처분요구 목록임에도 2017. 8.~ 2018.12.까지 ‘∞∞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83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공사 하자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A, B, C, D, E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 ∴ 마을안길정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 ∴ ∴ 마을 지내 도로 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2017.11.20. § § 대표 F과 35,020천원에 「∴ ∴ 마을안길정비공사」를 계약 체결하고 2017.11.22. 착공하여 2017.12.26. 준공하였음.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 ∴ 마을안길 정비공사	□□▽ ▽	○배수로정비(1000C) : L=90m ○콘크리트포장 : A=109.2m ²	48,622	37,150	11,472	2017.11.22. ~ 2017.12.26.	§§ 대표 F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기준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 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했어야 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2019.6.11.~6.13.) 동안 「∴∴마을안길정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과 상관 없는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표지판, 안전로프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구입 항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항목으로 집행한 내역에 대해 확인 및 정산을 미이행 결과, 990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실무 담당자 G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정산 없이 지급한 990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요구

제 목 환경관리비 등 정산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사무소
조 치 기 관 □□사무소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 ○○리	○암반관정 1식 ○수중모터 1식	27,397	18,547	8,850	2017.11. 7. ~ 2017.12.16.	☆☆ 대표 H
※※지구 집수암 거 설치사업	□□ ※※리	○유공관(Φ400) : L=100.0m	18,680	9,980	8,700	2017.11.27. ~ 2017.12.24.	★★ 대표 I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제6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비용부담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비용금액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따라 발주자 및 공사감독은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기성 또는 준공검사시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기계 대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해당 경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 2017.11. 7. ☆☆ 대표 H와 18,547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이하 “①” 이라고 한다) 및 2017. 11.21. ★★ 대표 I와 9,98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지구 집수암거 설치사업」(이하 “②” 이라고 한다)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내역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①의 경우 96,498원 ②의 경우 35,420원을,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①의 경우 49,455원 ②의 경우 27,911원을 계상하였다.

□□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가 의무경비로 포함된 환경관리비와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집행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세심한 주의 없이 ①에서는 187천원, ②에서는 90천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정산 없이 지급한 ①의 공사비 187천원, ②의 공사비 90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처분 · 주의요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2017.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하여 444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8조제1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하면서 아래 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위반 현황’ 과 같이 민원서류 접수등록번호 누락, 민원서류 지연 접수, 취득목적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위반 내용>

연번	접수번호	접수일자	취득목적	위반내용
1	—	—	농업경영	기재누락, 취득목적 상이
2		—	농업경영	민원접수 누락
3		—	농업경영	민원접수 누락
4		—	농업경영	민원접수 누락
5		—	농업경영	민원접수번호 기재 누락
6		—	농업경영	민원접수번호 기재 누락
7	—	—	농업경영	접수지연
8		—	농업경영	접수지연 및 불필요한 서류 징구
9	—	—	주말체험영농	불필요한 서류 징구
10	—	—	주말체험영농	불필요한 서류 징구
11		—	주말체험영농	민원접수 등록 기재 누락
12		—	농업경영	민원접수번호 등록 기재 누락
13		—	농업경영	민원접수 등록 기재 누락 및 불필요한 서류

처분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겸 책임자 J에게 ‘**훈계**’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처분 · 주의요구

제 목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처리 부적정 현황

연번	납부자명	부과대상	부과일자	부과금액	부적정 내용	비고
1	K	주민등록법 위반	-	80,000	처분사전통지 누락	감경
2	L	주민등록법 위반	-	32,000	처분사전통지 누락	감경
3	M	말소 재등록	-	56,000	처분사전통지 누락	감경
4	N	주민등록 신고지연	-	8,000	처분사전통지 누락	감경
5	O	재등록	-	40,000	처분사전통지 누락	감경
6	P	주민등록법 위반	-	80,000	처분사전통지 누락	감경
7	Q	주민등록증 신청 지연	-	4,120	처분사전통지 누락	감경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18조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여야 하며, 의견제출기간내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감경 전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는 2018.4.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 신고 지연 등 7건의 주민등록과 태료 부과시 당사자에게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으나 부과처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 사항

실무담당자로서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R에게 ‘훈계’ 처분, 실무책임자 S, T, U에게는 ‘주의’ 처분 함.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